

2021년 06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72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1년 06 (Vol.72)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1년 7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김영현, 송유미, 이경신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2021년 06 (Vol.72)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시행령」·「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10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부산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광주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울산시,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충남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충남도,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향' 주요 내용 및 개선 사항 논의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공청회 개최

14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 총 11건 사업 선정
국토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 5곳 선정
국토부,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모집

행복청, 시민체감형 지능형도시 사업 확산 추진
해수부·통영시·MBC, 어촌 빈집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3개소 선정
인천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
대전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7개소 선정
경기도, 제13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강원도, 2022년도 어촌테마마을 공모사업 선정
충북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거버넌스' 공식 출범
충남도,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경북도,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95개소 선정
경북도, 2021년 농촌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
제주도, 국토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20개소 선정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25

서울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한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구축
부산시, 스마트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전면 시행
인천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 스마트도시 건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추진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2021년도 본 사업 착수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1년 06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정책과. 2021.06.01.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이번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사유와 책임수행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수행방법 개선 및 민간 업무범위 마련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 마련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 확대
측량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 추가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주택건설공급과. 2021.06.02.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 * '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 적용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비를 위한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적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비율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도시숲법」 하위법령 제정·공포

도시숲경관과. 2021.06.07.

완료

도시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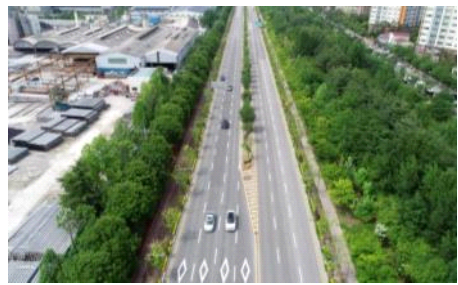
산림청은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

「도시숲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도시숲 등 기본계획 및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도시숲 등 기능별 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의 범위·방법,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 기관 지정 및 인증기준·절차, 도시숲 등의 기부채납,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포항시_철길 도시숲]



[광주광역시_미세먼지 차단숲]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2021.06.10.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했다.

*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 -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예시: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 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공포·시행

도시경제과. 2021.06.17.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절차 간소화(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혁신·실증사업 관리규정 정비 등('21.3.16. 공포)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 확대	기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도시(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20년 9월에 5곳 지정) → '전국'으로 적용범위 확대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도시 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p>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사업 지속 가능</p> <p>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 마련</p> <p>*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 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승인 받은 기업</p>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p>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 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p> <p>* 「스마트도시법」 제3조 상 대상지역(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혁신도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개발사업)</p>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산림복지국 정원팀. 2021.06.23.



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 정원법’) 개정」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법령을 시행한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치유* 도입과 정원의 구분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정원치유(법 제2조) :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장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 증진시키는 활동

[개정안 주요내용]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신설
생활정원을 조성·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체적 명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정원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의무화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 신설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도시관리과. 2021.06.02.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 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수립기준은 정부의 '8.4 공급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앞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안 주요내용]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주요내용	
사업대상지 기준	사업대상지 : 역세권(승강장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추진
용적률 체계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며,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21.5.20. 시행)
건축계획 기준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높이제한 완화책으로 채광 등 확보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 가능토록 변경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시행

공동주택과. 2021.06.03.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에 게시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용도지역 변경시 용적률 및 공공시설등 부담비율]

용도 지역	변경전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제2종일반 주 거	제2종일반 주 거	제3종일반 주 거
	변경후	제2종일반 주 거	제3종일반 주 거	제3종일반 주 거	준주거	준주거
용적률 (%)	기준	190	190	190	200	250
	허용	200	200	200	220	270
	상한	250	250	250	400	400
공공시설등 부담비율		-	10%	10%	20%	1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항 목	우 수 디자인	장수명 주 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 빌 딩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 보 전	비 고
인센티브	15%	10%	3~9%	10~15%	6~15%	5%	최대 20%이내

부산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 추진

기후대기과. 2021.06.03.



부산시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의 비산업 부문과 산업, 발전 부문을 비롯해 산림, 습지 등의 흡수원까지 전 부문에 대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본방향이 포함될 방침이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시민 참여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계획에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균형발전정책과. 2021.06.22.



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전남 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됨(2030.12.31.)에 따라 2014년에 수립한 발전종합계획을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비전, 추진전략, 사업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청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4대 추진전략, 8개 프로젝트, 36개 단위사업, 86개 세부사업이 반영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울산시,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관광진흥과. 2021.06.03.



울산시는 3일 ‘제7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는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관광진흥위원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반영하고, 중장기 관광 발전방향 설정 및 2022~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관광사업을 검토하는 자리이다. 해양과 산악, 산업과 생태, 관광객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어울림 생태관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울산의 관광개발 여건과 동향을 분석하고, 울산형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체류형 관광거점 개발, 관광도시 울산 인식 제고 등 6개의 전략과 세부사업계획 등을 제시한다.

울산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의 주요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체계와 자원조달방안, 개발에 따른 경제·사회·문화·환경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 반영된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최종 협의 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충남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정책기획관. 2021.06.03.



충남도는 7일 인천시&경기도&전북도 등 서해안권 4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 10년 연장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 서해안권 발전전략 및 사업을 재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국가전략산업 집적 및 클러스터 조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특화산업 육성, 국제적 생태&문화&관광거점 조성 및 벨트화, 초국경&광역 공동발전 협력 체계 구축, 지역&발전거점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이 제시됐다.

충남도,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향' 주요 내용 및 개선 사항 논의

기후환경정책과. 2021.06.08.



충남도는 8일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탄소중립·그린뉴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2021년 충남 녹색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안건은 다양한 계층·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릴레이 충남행동 퍼포먼스를 제작해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민 실천 운동 추진 계획과 연계하는 '탈석탄 콘퍼런스 충남행동 퍼포먼스 프로그램'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전문가 자문을 수렴했다.

두 번째는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방향'으로 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의 주요 내용과 범위 등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창구 운영

정책기획관. 2021.06.09.



제주도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해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22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함께 수렴할 계획이며,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도의회 동의 시 최종안이 확정돼 고시된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쉼터 행복제주', '지속가능한 제주다움 청정제주', '활력 있고 상생하는 혁신제주',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제주'를 목표로 8대 발전 전략에 따른 36대 전략(부문)별 세부 계획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정책기획관. 2021.06.22.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사에서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 이후, 초청 전문가 9인의 지정토론과 함께 도민 등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제주도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오는 25일 최종보고회와 30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7월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위한 온·오프라인 병행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재생과. 2021.06.28.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전략계획(안)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7월 3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수립한 전략계획 변경(안)에는 '도민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선순환 도시재생'이라는 도시재생의 철학과 비전 아래 5가지 전략 계획을 담았다. 5가지 전략계획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재생,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주도 재생,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지 재생, 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복지재생,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재생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방침에 맞춰 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 방향도 재수립했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 총 11건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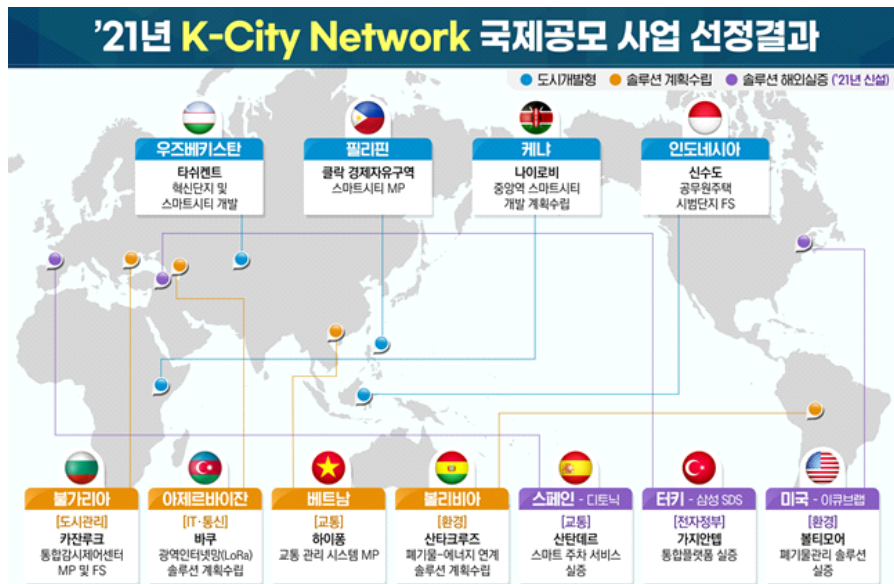
도시정책과. 2021.06.01.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총 11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 4건(4개국), 솔루션형 계획수립 4건(4개국), 솔루션형 해외실증 3건(3개국)이며,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3건, 기타 5건(유럽 2, 북미·남미·아프리카 각 1건)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형은 4~6억원, 솔루션형 계획수립은 2~3억원, 솔루션형 해외실증은 4~6억원 규모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 조사(F/S) 수립과 초청연수 그리고 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국토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지 5곳 선정

도시활력지원과. 2021.06.03.



국토교통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하였다.

* 새뜰마을 사업: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 일자리, 주민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는 신청지 접수(~4.30), 서면평가(5.14)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 모집

건축정책과. 2021.06.03.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9일(금) 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건축물 100개 동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서'는 건축물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건축물의 구조 및 화재안전, 에너지성능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자동차 매매 시 활용 중인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유사하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과 국민생활 속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노유자 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서,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상태 점검 확인결과와 해당 건축물에 최적화된 성능관리 방안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청, 시민체감형 지능형도시 사업 확산 추진

지능형도시팀. 2021.06.03.



도시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능형도시 리빙랩 실증사업 확산과 지능형 서비스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체감형 지능형도시 기술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측정·알림서비스, 지능형 횡단보도,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 주정차위반 차량단속 고도화, 세종시 생활정보 포털 서비스(세종엔) 고도화, 조정밀 실시간 버스정보제공서비스 등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능형도시 기반시설구축(3단계 1-2차)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규모로 오는 6월경에 착수하여 2022년 7월경에 완료하고 시민에게 보다 더 고도화된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지능형도시 기반시설구축은 각 생활권 조성 시기에 맞춰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며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1, 2단계 사업은 행복도시 1~4생활권까지 주민입주가 완료된 지역에 지능형 기반시설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정보제공, 방법, 공공 와이파이(WIFI) 등의 지능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은 2030년까지 5, 6생활권에 지능형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에 구축된 지능형 기반시설 고도화를 진행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능형교차로]



[자율주행 순찰로봇(예시)]

해수부·통영시·MBC, 어촌 빈집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촌어항재생과. 2021.06.10.



해양수산부와 통영시, MBC가 어촌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월 9일 ‘어촌빈집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MBC TV 다큐플렉스** 프로그램인 「빈집살래」를 결합하여 어촌 지역의 빈집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 다큐멘터리와 플렉스의 합성어로, 정통 다큐멘터리는 물론 강연, 시트콤,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임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제작진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통영시에 위치한 달아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MBC와 통영시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을 선정한 뒤 빈집을 귀어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유 공간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빈집살래 in 어촌 영상화면]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13개소 선정

어촌어항재생과. 2021.06.22.



해양수산부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2년도 3개 과제의 사업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어촌종합개발 5개소, 어촌테마마을 3개소, 시·군 역량강화 5개소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 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촌 테마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과제가 추진된다.

[시·도별 선정현황]

구분	선정지역	개소별 총사업비/사업기간
어촌종합개발	호포권역(태안), 지도읍내권역(신안), 대서면권역(고흥), 금당권역(완도) 구영권역(거제)	(개소별 총사업비) 100억 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내
어촌테마마을	노실마을(삼척), 척골마을(보령), 성산마을(서귀포)	(개소별 총사업비) 100억 원 이하, (사업기간) 5년 이내
시·군 역량강화	삼척시, 태안군, 장흥군, 거제시, 통영시	(지자체별 총사업비) 2억 원 이하, (사업기간) 1년

인천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18개소 선정

주택정책과. 2021.06.01.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총 18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63억 원 중 국비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에 인천시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소가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에너지, 생활환경, 신기술, 미관 등을 신축건물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에너지 절감률 최소 30% 이상 개선, 환기시스템 설치로 실내 미세먼지 75%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7개소 선정

주택정책과. 2021.06.01.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7개소(총사업비 14억원)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본격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어린이집,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외벽단열, 단열창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신재생(태양광) 설치 등 탄소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이다.

또한, 대전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지원사업에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50호가 선정되어 국비 24억원을 확보, 매입임대 그린리모델링 64호 선정되어 국비 2억3천만원 확보했고, 금년 추경예산에 시비(40%)를 확보하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 제13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실시

건축디자인과. 2021.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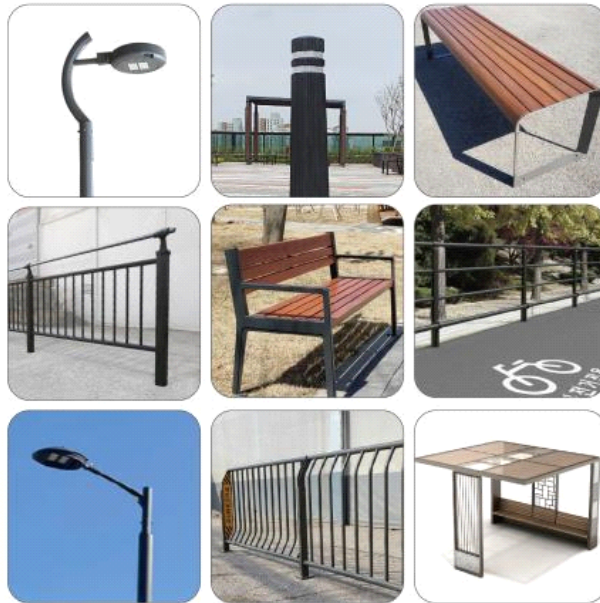
완료

도시
정책

경기도는 ‘2021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8점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제도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총 9종 38점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 중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의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관련 사진]

강원도, 2022년도 어촌테마마을 공모사업 선정

강원도환동해본부. 2021.06.22.

진행

도시
정책

강원도환동해본부는 해양수산부가 공모하는 2022년도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테마마을”에 삼척시 노실 어촌마을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4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어촌테마마을 공모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9억원 (국비 48, 지방비 21)이 투자된다. 고령화로 침체된 삼척시 노실 어촌마을에 「원 클릭 감성 낚시마을」 테마 주제로 낚시어선 전용 터미널 건립, 폐교를 활용한 캠핑존, 원격의료, 낚시교육 등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마을길, 휴양 경관길 등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어촌마을로 변모시켜 어촌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삼척시 노실마을 공모사업 조감도]

충북도,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거버넌스' 공식 출범

신성장동력과. 2021.06.11.



충청북도는 11일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의 전략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한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협약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거버넌스에는 총 16개, 자치단체, 기관·지역병원·금융기관·기업체·지역커뮤니티가 참여한다.

주요협약 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솔루션의 구축·실증 및 사업화 촉진', '스마트시티 혁신솔루션의 보급·확산 및 법·제도적 규제 개선',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홍보'에 협력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정보와 사업운영 성과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충남도,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건축도시과. 2021.06.27.



충남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인증하는 '제12회 충남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국내업체와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의 현장 설치를 완료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이다. 구체적으로 벤치, 파고라, 가로등, 공원등, 펜스, 보도블록, 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등이 선정 대상이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도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 건축도시과로 우편을 통해 받으며, '충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북도,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대상지 95개소 선정

건축디자인과. 2021.06.03.



경상북도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총 95동이 선정되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사업비 331억 원(국비 231억 원 포함)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종 확정 된 95동(어린이집18, 보건소73, 의료시설4)은 6월중 설계 용역 착수하여 7월중 공사발주 및 시공으로 연내 사업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선정 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83동에 사업비 422억 원으로 현재 설계중 8동, 설계완료 30동, 공사중 44동, 공사완료 1동으로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도, 2021년 농촌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

농촌활력과. 2021.06.09.



경상북도는 농식품부의 '2021년 농촌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상주시가 강원 영월군, 충북 괴산군과 함께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2021년 시범사업으로 첫 시작. 농촌의 체계적 공간관리 제도의 부재로 주택과 공장, 축사, 에너지 시설이 혼재되는 등 난개발이 만연하고, 농촌다움의 훼손이 심각한 지역에 농촌특성에 맞게 용도별로 구분집적화하여 경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력 창출, 재생에너지 이용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이 사업은 금년에 농촌지역의 체계적 개발·관리를 위한 시·군 농촌 공간 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국비 최대 300억원 등 총사업비 437억 원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사업내용은 상주시 청리면 일원에 축사 철거 및 이전,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축산시설 집적화로 난개발을 막고, 빈집·상무축구생활관 등을 정비해 귀농·귀촌인과 연결, 귀농 귀촌 1번지 상주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국토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20개소 선정

건축지적과. 2021.06.15.

진행

건축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도내 공공건축물 20개소 모두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건축물 유형별로 어린이집 8개소, 보건소 12개소 등 총 20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68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확보된 국비를 투입해 도내 공공건축물 20개소의 단열성능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한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구축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1.06.07.

진행

건축
정책

안전

서울시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 융합 기술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위험요소를 실시간 자동으로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을 12월부터 가동한다.

건물에 IoT 센서를 부착해 기울기·균열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를 저장·분석해 정확성을 검증하고 구조물의 이상변화도 분석해 위험을 감지한다. 플랫폼의 관리 대상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되는 위험건축물(D·E급)’, ‘30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미흡·불량 등급)’, ‘옹벽·인공 비탈면 같은 주택사면(D·E급)’이다.

서울시는 올 9월부터 중량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에 있는 약 46개 노후 민간건축물에 IoT 센서를 부착한다. 이후 11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블록체인 기반 위험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안)]

부산시, 스마트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전면 시행

총괄건축기획과. 2021.0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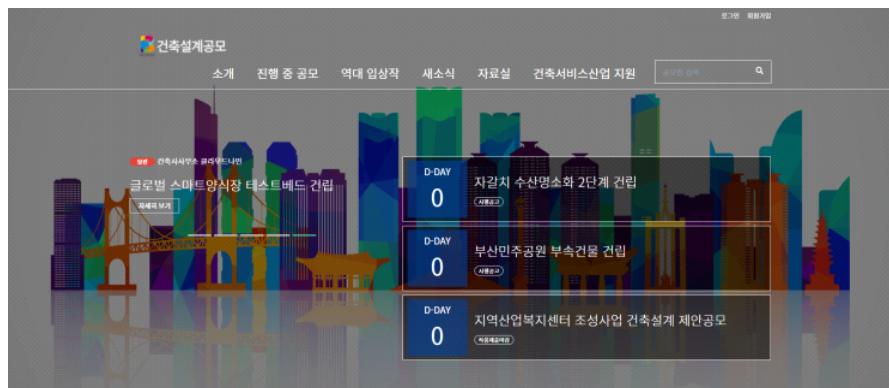
완료

건축
정책

부산시는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6월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건축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공모 추진주체를 일원화하고 통합·운영하여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모자료 관리를 체계화한다.

부산시는 이를 공모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전자기록관과 설계공모 입상작을 게시하는 사이버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해 부산시의 도시·건축정책 및 디자인을 꾸준히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홈페이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구·군 및 시 설립 공공기관으로까지 이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기관별로 시행하던 설계공모를 통합·운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사용자 화면]

인천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 스마트도시 건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06.17.



인천광역시시는 17일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GeoBIM (Geospatial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GIS와 BIM의 결합을 말하며, GIS와 BIM은 도시건설 생애주기 전반에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작업을 가속화 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킴

- GIS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물 및 인프라 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운영/관리 정보를 3D 모델 기반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인천시와 GS건설은 시의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오빔(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인천지역 공사현장 9곳을 지정해 지역정보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가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갖고 소통하며 건설현장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경남도,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추진

건축주택과. 2021.06.17.



경상남도는 16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아파트 통합플랫폼'은 도내 공동주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동주택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2년 g-아파트 통합플랫폼 구축과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홍보·보급 및 교육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모바일 앱 기반 서비스를 추가하고 대상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모든 공동주택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2021년도 본 사업 착수

토지정보과. 2021.06.18.



경상남도는 18일 2021년도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모든 정책활동은 어딘가에 위치한다(making spatial decision)’는 개념으로, 텍스트 형태인 행정자료를 지도 위에 구현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경남도는 7개월간의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8일 도민서비스를 오픈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해에는 구축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제로페이 및 전통시장, 산업단지관리 및 분양정보, 주민안전시설, 빈집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지도기반 위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과학적인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는 활용모델을 개발·고도화하고,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구축하는 등, 정밀도로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들을 플랫폼에 탑재한다.

아울러 현재 단순한 공간정보 운용 기능을 고도화하여 각종 업무별 주제도 생성, 공간분석(버퍼분석, 밀도분석, 교차분석 등), 통계지도 기능, 사용자 맞춤형 지도제작 등 공간행정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용자 계정 관리 등을 개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될 도시재생 활용모델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서 청년 정착과 교육, 일자리 창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디지털 공간 안으로 옮겨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방향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제주도,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건축지적과. 2021.06.15.



건축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일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의 도면을 전산화해 도시계획 항목별 가시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작하고, 제작된 도면을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GIS*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사업이다.

*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체계) : 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 컴퓨터에 입력·정보·처리하고, 이를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종합해 제공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이번 용역은 지방비 1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5월 11일 착수해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 Sejong-si, 30103, Korea



ISSN 2635-5140